야3당 쇠고기 재협상 본격 투쟁 돌입

13~14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협상 촉구 결의안' 곧바로 제출

농림장관 해임안·국정조사 요구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이 이번 주(12~17일)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오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가 예정돼 있고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커 여·야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장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쇠고기 재협상 없인 FTA 논의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13~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에서 강공을 벼르고 있다. 특히 원내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고시 가처분 신청과 위헌 심판 청구 등 각종 법적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권은 장관고시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은 우선 15일 장관 고시를 막기 위해 13일~14일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바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가간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 고시만으로도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관 고시 발효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률검토 결과 ▲합의문과 고시 내용이 다른 곳이 21곳이나 있고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고시의 법적 효력은 정지되고, 야권은 그 기간 동안 정부여당에 재협상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그는 또한 "헌법 36조 국민 건강권에 위배되고, 헌법 60조 주권의 제약에 대한 국가간 합의,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통일외교통상위원 연석회의에서 현안 등과 관련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문인철 행정실장도 "현재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이와 함께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주권을 근거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또 정운천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운천 장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며 "대통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은 야3당의 의석수만으로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정조사는 오는 29일로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권은 국정조사가 불발되더라도 18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거론하며 쇠고기 협상 쟁점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야3당 실무진이 모여 최종 일정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의 시간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동물 사료 강화 조치 모르고 합의"

민변, '美 쇠고기 國調'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던 '광우병 의심소 사료화 금지조치'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내용 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농식품부는 10일 '광우병 의심소의 사료 사용금지와 관련해 미국 관보와 정부 설명이 다르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우리 부의 설명은 미 식약청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미국측 자료와 관보 게재내용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미 식약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료 금지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공포한 최종 규정에서는 '30개월 월령 이상만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 및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므로 미국의 입안예고 내용과 최종 법령간 실제로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광우병 검역의 핵심은 '30개월 월령 제한 철폐'이며 한국 협상단은 미 식약청 조치가 관보에 공고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 그런데 미국의 입법예고와 관보 내용이 다르므로 착오·기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협상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22일부터 진행된 검역기준 입법예고는 본질적 내용을 알리지 않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쇠고기 입법예고 기간 20일 적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1일 한미 쇠고기 협정 관련 입법예고 최소기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률·훈령·예규가 아닌 '단순운영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행정예고안 포함)'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43조)은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있는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한 만큼 40일간을 연장해 재예고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美 쇠고기 어떤 부위 수입되나

갈비·사골 위주 들어와

'LA갈비+부산물' 패키지가 대부분

조만간 새 수입조건이 고시와 함께 발효되면 주로 '갈비'와 사골·꼬리·내장 등 '부산물' 위주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이 악화된 여론 때문에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기에는 우선 소규모 식당 등에 제한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뼈없는 1만2천여t, 샘플 등 먼저 들어와=11일 농수산식품부와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미 협상이 타결돼 같은달 22일 입법예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1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고시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일단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반대 의견이 합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고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뼈없는 1만2천여t·샘플 먼저 수입

초기엔 소규모 식당에 제한 공급

새 수입조건이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검역 작업도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작된다.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컨테이너야드(CY) 등에 쌓인 채 유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미국에서 검역까지 마치고, 롱비치항구 창고에 보관중인 약 7천t 역시 고시 공포와 함께 지체없이 한국으로 출발한다.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기간을 감안하면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미, 이윤 큰 꼬리·내장 등 갈비에 끼워팔기=국내 육류수입업체들은 대부분 지난주 미국 주요 메이저 육류업체들과 새 수입조건을 적용한 수입 계약을 마무리했다. 기존 '30개월미만, 살코기만' 수입조건 아래 한국으로 수출했던 미국내 31개 작업장은 새 수입조건 발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출 자격을 갖추는 만큼, 우리나라가 새 수입조건 고시와 동시에 최초 적용 기준 도축일자만 알려주면 그 이후 도축된 소에서 LA갈비 등을 한국 수출용으로 가공해 배에 싣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업계는 소량의 '맛보기'용은 고시 이후 1주일안에, 배로 들어오는 본격 수입 물량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면 속속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되는 부위는 국내 수요가 많고 미국내 산지가격이 한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갈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나머지는 식습관 차이로 미국인이 거의 찾지 않지만 한국내 수요가 많은 사골·꼬리·우족·내장 등 부산물로 채워진다.

◇수입업체 여론 추이에 '촉각'=그러나 국내 수입업체들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특수' 기대는 커녕, 악화된 여론 때문에 판로 확보마저 어려운 처지다. 대형 유통업체가 눈치를 보느라 선뜻 미국산 쇠고기 취급에 나서기 힘든 상황인데다, 대형 식당들도 최근 정부가 강하게 펼치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개 육류수입업체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연령제한 없이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한·미간 협상이 타결됐으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점을 감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업체들은 미국인들이 가정·식당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질 좋은 높은 등급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